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다룬 언론 보도 분석해보니

## 눈길끌기식 갈등 프레임 경제적 중요성 프레임 채택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파업 시작부터 노사 합의에 이르기까지

언론은 저마다의 시각으로 이를 보도했다. 이번 사안에 대한 언론의 논조는 둘로 나뉘었다. 각기 다른 성향을 띠는 조선일보·중앙일보와 한겨레, 그리고 방송사가 이 과정을 어떻게 다뤘는지 짚어본다. 편집자 주

김춘식 /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 파업은 불법, 노조의 무리한 요구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동자조합 조선하청지회의 파업 시작일부터 노사 양측 합의 및 협의에 이르는 과정<sup>1)</sup>을 언론이 어떻게 묘사했는지 살폈다.<sup>2)</sup>

먼저, 최대 발행부수와 최대 유료부수를 내세운 조선일보<sup>3)</sup>가 검색 기간 내 A섹션에 보도한 기사는 모두 36건이었고, 이 가운데 1면 게재 기사는 5건 이었다. 모든 1면 기사는 언론사가 선정한 주요 기사 혹은 심층 기획 기사(PICK)들로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하 민노총)’ 하청 파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및 대처’(7월 19·20일)<sup>4)</sup>, ‘채권은행의 강경한 태도’(7월 21일), ‘불법점거로 인한 폐해’(7월 2·18일)에 주목했다. 1면 기사의 핵심 내용은 사설에 잘 축약 정리돼 있다. 사설은 세 건<sup>5)</sup>이었고, 제목에서 드러나듯 파업 행위의 폭력성(‘시너통’, ‘극렬 투쟁’, ‘상습 과격 행위’)을 강조하고 법원의 무른 판결(“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노조는 대우조선해양에 하루 300만 원씩 지급해야”)을 비판했다. 아울러 파업 행위자의 자격 적합성(“파업 노조원들은 대우조선 소속도 아니다”)을 문제 삼으면서 ‘자격이 안 되는’ 하청업체 노동자 120여 명이 단지 ‘돈을 더 달라며’(15

일 자 사설)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 작업장을 마비 시켰다고 보도했다. 파업의 배경 및 원인을 아주 단순하게 정리한 셈이다. 아울러 조선일보는 시민이 회사와 함께, 그리고 같은 민노총 금속노조 소속인 대우조선 지회가 하청 지회에 파업 중단을 요청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게다가 조선일보는 유독 ‘민노총’과 ‘민변’ 등 일부 시민단체가 위험한 행동을 부추긴

<sup>1)</sup>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업체 노동자조합인 조선하청지회는 2022년 6월 2일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고, 파업 51일째인 7월 22일 노사 양측은 임금 4.5% 인상에 합의하고 ‘민·형사상 면책’을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sup>2)</sup> 종이신문의 경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보수적 논조) 그리고 한겨레(진보적 논조)가 보도한 사설과 1면 기사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sup>3)</sup> 네이버 뉴스 초기 화면에서 검색어(‘대우조선해양 파업’)를 입력하고, 기간(6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과 기사 유형(지면 기사)을 정하고 매체(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를 특정해 관련도순으로 검색된 뉴스를 읽고 파업에 관한 언론 보도의 특징이 어떠한지를 살폈다. 이 글에서 보도 일자는 등록 일자를 뜻한다.

<sup>4)</sup> 1면 기사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7월 2일 <협력업체 120여명 불법점거에 세계최대 조선소 독 마비>, 7월 18일 <민노총 하청 파업 47일… 대우조선 협력사 7곳 ‘눈물의 줄페업’>, 7월 19일 <尹대통령, 긴급 장관회의 지시… 경찰청장 후보자, 헬기 타고 거제로>, 7월 20일 <대우조선 하청파업 48일… 尹 “기다릴만큼 기다렸다”>, 7월 21일 <“파업 계속땐 특단 대책”… 産銀, 대우조선 피산도 검토>

<sup>5)</sup> 조선일보 7월 15일 <(사설) 협력업체 노조가 세계 최대 조선소 마비시켜도 어쩔 수 없다니>, 7월 16일 <(사설) 또 시너통에 고공 농성, 시대착오 극렬 투쟁 언제까지 할건가>, 7월 19일 <(사설) 민노총의 상습 과격 행위에 대한 법원의 시대착오적 인식>



2022년 9월 5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국회 앞에서 김형수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의 단식농성 19일 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다며 시대착오적인 노동운동 방식을 비판하고, 하청업체 노동자의 수입 감소가 문재인 정부의 주52시간제 도입과 높은 관련이 있으니 정부가 제도적 차원의 문제를 정리하는 ‘노동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리고 유최안 부지회장이 가로·세로 높이 1m 쇠창살에 스스로 몸을 가둔 농성을 ‘끝장 농성’(7월 16일 자 사설의 사진 설명)이라 칭했다.

중앙일보 기사 14건 가운데 사설은 한 건이었다. 19일 자 사설(<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응을!>)은 ‘격한’ 표현을 사용해 파업 행위를 비난하지 않았다. 하지만 파업이 불법이고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중앙일보의 시각은 조선일보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하청노조의 점거 농성은 합법의 틀에서 벗어났”으며 “30% 임금 인상 요구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무리한 수준”이라 평가하면서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파업에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1면에 게재된 기사는 두 건이고 모두 21일 자 기사였다. 하나는 관계부처 장관의 합동 담화문 발표

에 관한 기사(<대통령 “불법파업, 장관 나서라” 장관 6명 “형사처벌·배상” 경고>)였고, 나머지 한 건은 노조 간 갈등에 주목한 사진(<“파업” vs “절회”...대우조선 앞 노조 간 맞불 집회>)이었다. 눈에 띠는 기사는 노동 전문기자가 진행한 인터뷰 기사였다. 이 기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문성현 전 위원장의 입을 빌어 정책적 측면에서 조선업계 하청노조의 파업 이유와 해결책을 다뤘다. 인터뷰에서 문성현은 “민주노총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참여했다면 하청노조의 파업을 막을 수 있었다”며 정치권의 노사 개입과 민노총의 결탁이 정책적 해결을 방해한다고 비판했다.<sup>6)</sup>

6) 김기찬, <문성현 “조선업 호불황 반복…이번 사태 키운건 민노총”>, 중앙일보, 2022.7.2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8543>.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성현은 파업의 원인(“조선산업의 특성과 그에 따른 인력 사이클을 감안해 임금 등 근로조건과 고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게 없으니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제일 밑단의 하청업체 근로자는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을 진단하고, 정책적 해결방안(“대우조선해양 사태는 노사문제 이전에 조선산업 정책의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을 제시했다.

**[표]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 저녁종합뉴스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관련 보도**

방송사	7월 22일 저녁종합뉴스 기사 제목
KBS	50일 만에 파업 끝나…대우조선 ‘극적 타결’
	최대 쟁점 ‘손배소’ 미합의 이유는?…불씨되나?
	“휴가 반납, 납기일을 맞춘다”…내일부터 선박 건조
	50일 만에 타결…남은 과제는?
MBC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51일 만에 극적 타결
	한 달 만에 철장 구조물서 나와..거제 현장 연결
	파업은 끝났지만 고질병은 그대로
	정부 “대우조선 불법 점거 법·원칙 대응”
SBS	대우조선 파업 51일째 ‘합의’…갈등 여지도
	31일 만에 철창 밖으로…과제로 남은 ‘파업 휴유증’
	공권력 압박 속 극적 타결…정부 “법·원칙 따라 해결”
	아직 손도 못 댄 ‘원–하청 구조’…근본 문제 바꿔야
채널A	쌓이는 적자에 ‘고민’…대우조선해양 앞날은?
	대우조선 하청노사 협상 불완전 타결…손배소 불씨 남았다
	대우조선해양 “본사 파업 손실 8천억…손배 청구 그대로”
	“부정투표 정황”…‘금속노조 탈퇴 찬반’ 1시간 만에
JTBC	[아는 기자] 대우조선 하청노사, 임금 4.5% 인상…8천 억 손실은?
	대우조선 하청노사 51일만에 협상 타결…파국은 피했다
	책임 면제 두고 노조 “추후 협의”…회사 “법과 원칙 따라”
	결론 못 낸 ‘손배소’…대우조선해양 갈등 불씨는 여전
TV조선	[이슈체크] 다단계 하청 뒤에 숨은 ‘진짜 주인’…발빼거나 떠밀거나
	철창서 밖으로, 상공서 땅으로…살아서 돌아온 노동자들
	[밀착카메라] 타결 전까지 팽팽했던 긴장감…거제는 이제 달라질까
	대우조선 하청노사 협상 극적 타결…파국 막았다
	31일 만에 옥쇄 농성도 풀었다…거제 시민들 안도
	‘손배소’ 여전히 불씨…대우조선 “합의 관계없이 소송 제기”

## ■ ■ 정부의 강경 대응 비판

한겨레는 두 건의 사설에서 정부의 강경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7월 19일 저녁에 등록된 사설(<대우조선 파업에 ‘공권력 투입’ 무력시위 할 땐가>)은 대

통령(“산업현장의 불법상황이 종식되어야 한다”)과 집권 여당 원내대표(“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에 엄정 대응해야”)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경찰청장의 현장 방문을 ‘무력시위’와 같다고 해석했다. 22일 자 사설(<대우조선 하청노동자 51일 투쟁이 우리 사회에 던진 숙제>)은 하청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조선산업 구조의 실상이 드러난 만큼 정부가 공정한 중재자이자 조선산업 정상화 정책자 역할을 맡을 것을 주문했다. 나머지 28건의 기사 중 1면 기사는 모두 6건이었다. 7월 19일에 등록된 1면 기사<sup>7)</sup>는 눈으로 본 현실을 증언하듯이 쓴 기자의 해석적 관점이 담긴 일종의 브포르타주 기사였다. 기자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의 헬기 이용 현장 방문을 묘사하면서 ‘전운’, ‘위압적인 공권력의 프로펠러 소리’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파업 타결을 전하는 22일 자 1면 기사는 51일간 지속된 그간의 파업 일정을 정리하면서 ‘철제 감옥’으로 상징되는 이번 파업이 조선 하청 노동자의 열악한 실상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됐지만 최초 요구를 관철하지 못하고 민형사상 면책도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다고 적었다.<sup>8)</sup> 한겨레는 여타 기사에서 정부의 공권력 투입이 현실화될 것을 우려했다. 제목에 대통령의 강경 발언을 인용부호로 전하고 정부의 강경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사 간 협상이 본격화된 이후에는 회사가 쟁의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관행에 주목하고 이러한 관행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전략에 가깝다<sup>9)</sup>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한겨레는

7) 박태우, <“이대로 살 순 없다” 철창의 외침 위로 ‘공권력 헬기’가 날았다>, 한겨레, 2022.7.19,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51606.html>

8) 박태우·서혜미·최상원, <대우조선 하청노조 임금 못 올렸지만... “이 합의서 쓰는데 6년 걸렸다”>, 한겨레, 2022.7.22,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52055.html>. 나머지 1면 기사는 대통령과 5개 관계부처 장관의 공권력 투입 가능성 시사(7월 18일), 손해배상 청구소송 및 민형사 면책 요구를 둘러싼 노사 간 이견(7월 20·21일), 정치권의 협상 타결 환영(7월 22일)을 다뤘다.

9) 신다은, <“고액의 손배 소송, 식물노조로” 대우조선에 돌아온 노무전략 ‘망령’>, 한겨레, 2022.7.21,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51873.html>

사람에 주목했다. 가령 7월 20일 등록 기사<sup>10)</sup>는 노조 원이 왜 최후의 수단으로 ‘난입’을 선택하고 스스로를 쇠우리에 가둘 수밖에 없었는지 저간의 사정을 설명하고 ‘합법’과 ‘불법’의 눈금으로 파업을 판단하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인식을 비판했다.

## ■ ■ 심층 보도 드물었던 방송

대우조선 하청노조의 파업을 전하는 방송 보도<sup>11)</sup>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의 첫 보도는 총리가 주재하는 제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가 파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후 나왔다. 종이신문 보도<sup>12)</sup> 보름 후인 7월 14일 공영방송 KBS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내보내면서 파업의 배경과 파업이 장기화되는 이유를 다뤘다.<sup>13)</sup> 이후 대통령이 국무총리와의 7월 18일 주례 회동에서 산업 현장에서의 불법 종식과 장관들의 적극적 대처를 촉구하자 방송사들은 22일까지 적게는 세 건 많게는 여섯 건을 보도하기도 했다.<sup>[註]</sup> 둘째, 몇몇 방송사들은 파업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특정한 형식의 기사를 보도했지만, 단순 사실 보도를 넘어서는 심층 기사의 수는 매우 드물었다. 예를 들어, KBS는 파업 관련 소식을 먼저 전한 후에 취재 기자와의 질의응답을, JTBC와 채널A는 각각 <이슈체크>, <아는 기자> 코너에서 파업의 진행 과정, 장기 파업의 원인, 해결책 등을 다뤘다.<sup>14)</sup> 구체적으로 지상파방송사들과 JTBC는 조선업계의 ‘원-하청 구조’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열악한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이 개선되기 힘들다면 구조적인 문제점 해결이 필요하다 보도했다. 하지만 내용은 그다지 심층적이지 않았다.<sup>15)</sup> 별도의 코너를 정하지 않은 SBS와 MBC는 앵커의 도입부 소개와 기자의 리포트로 구성된 전형적인 형식의 기사를 통해 원인과 해결책을 조명했다.

## ■ ■ 보수는 ‘법과 원칙’, 진보는 ‘노동자의 인간적 권리’ 프레임 채택

종이신문과 방송의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보도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늘 그랬듯이 보수적 논조의 신문은 ‘법과 원칙’ 프레임을, 그리고 진보적 논조의 신문은 ‘노동자의 인간적 권리’ 프레임을 채택했다. 구체적으로 조선일보와 한겨레 두 종이신문은 사안의 중요성과 뉴스 가치를 높게 평가했지만,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은 아주 상이했다. 조선일보는 ‘불법’과 ‘폭력’의 틀에서 파업을 조명하고 파업의 책임을 노조에게 물었다. 게다가 임금 감소의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주52시간제 시행에서 찾고

<sup>10)</sup> 이세영, <거기, 사람이 있다>, 한겨레, 2022.7.20,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1667.html](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1667.html)

<sup>11)</sup> 지상파방송(KBS, MBC, SBS)과 종합편성채널(채널A, JTBC, TV조선)의 저녁종합뉴스 프로그램에서 보도된 기사들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sup>12)</sup> 이우연, <‘1m’ 감옥에 몸을 가둔 노동자, ‘1만원 모금’으로 연대하는 시민들>, 한겨레, 2022.6.30,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9144.html](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9144.html). 한겨레는 파업 29일째인 6월 30일 자 등록 기사에서 유죄로 부지회장이 가로세로 높이 1m 크기의 철 구조물에 들어가 투쟁을 시작한 지 29일이 지났다고 보도했다. 김강한, <협력업체 120여명 불법 점거에 세계최대 조선소 독 마비>, 조선일보, 2022.7.2,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2/07/02/QUZNABBTD5BETCVAPSNWZK05DM/>. 조선일보는 7월 2일 자 등록 1면 기사에서 금속노조 소속 협력업체 직원들의 불법점거로 진수 작업이 중단됐는데 이는 회사가 세워진 1973년 이후 5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보도했다.

<sup>13)</sup> 홍성희,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임금 회복돼야”…정부 “점거농성은 불법”>, KBS, 2022.7.14,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09764>.

<sup>14)</sup> 김지숙, <50일 만에 타결…남은 과제는?>, KBS, 2022.7.22,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16001>  
박민규, <[이슈체크] 단단계 하청 뒤에 숨은 ‘진짜 주인’…발빼거나 떠밀거나>, JTBC, 2022.7.22,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67490](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67490)  
황규락, <[아는 기자] 대우조선 하청노사, 임금 4.5% 인상…8천억 손실은?>, 채널A, 2022.7.22,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306543](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306543)

<sup>15)</sup> 배주환, <파업은 끝났지만…고질병은 그대로>, MBC, 2022.7.22,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91213\\_35744.html](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91213_35744.html)  
조윤하, <아직 손도 못 댄 ‘원-하청 구조’… 근본 문제 바꿔야>, SBS, 2022.7.22,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833327&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833327&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좌파 시민단체’를 비난하는 등 정치 이념의 틀로 사안을 재단했다. 중앙일보도 조선일보와 마찬가지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하지만 노조를 감정적으로 비난하지 않은 점, 그리고 진보 인사의 입을 빌어 나름의 정책적 해결책을 제안한 점 등은 조선일보와 결이 다른 접근이었다. 이들 두 신문은 조선업계 원·하청 구조의 모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한겨레는 정부의 강경 대응을 비판하고 ‘노동자 삶’이 존중받는 해결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파업의 책임을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묻지 않았다.

둘째, 방송은 하청노조의 파업 자체를 중요한 사회적 사건으로 여기지 않았다.<sup>16)</sup> 7월 14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파업을 안건으로 다루자 비로소 첫 보도가 나왔고, 나흘 이 지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대통령이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발언하고 나서 관련 보도가 쏟아졌다. 공식 취재원(대통령, 고위 관료)에 의존해 뉴스를 생산하는 관행이 방송에서 매우 현저하게 발견됐다.

셋째, 거의 모든 매체들은 시민의 관심을 끌기 위한 ‘갈등 프레임’(정부·대우조선노조·거제주민 vs. 하청노조 간 대결 구도 강조), ‘책임귀인 프레임’(하청노조의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와 불법 점거, 원·하청 관계의 구조적 모순 지적), ‘경제적 중요성 프레임’(파업으로 인한 물량수주 차질 및 매출 감소 강조), ‘도덕성 프레임’(자유와 인간적인 삶의 가치 중시), 그리고 ‘인간적 흥미 프레임’(파업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이나 집단을 기술)을 채택했다. 정리하자면 파업이 사회적 사건이자 경제적 사건이니 갈등 프레임과 경제적 중요성 프레임은 모든 매체에서 발견되는 보편적 프레임이었다. 그리고 정부가 경제 정책을 책임졌으니 모든 매체들은 정부에게 책임을 물었다. 그런데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프레임을 구성하는 하위 내용의 방향성이 매체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 가령,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파업을 주도한 하청노조와 강경 대응에 미온적인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은 반면, 한겨레는 조선산업 정책과 공권력 집행을 책임진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대개의 방송 매체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하청업체 직원들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조선산업 내 원·하청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sup>17)</sup>

언론이 의제로 다루지 않으면 하청노조의 파업은 국민의 관심사로 전이될 수 없어, 결국 파업의 원인 진단 및 해결책을 찾으려는 사회적 차원의 움직임도 없게 된다. 열악한 노동 현실에 처한 이들의 파업이 ‘그들만의 외침’이 되게 하지 않으려면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기자들은 파업에 주목하는 정도와 이를 묘사하는 방식이 파업 행위의 지속 및 사회적 여론의 향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Flynn, 2000)는 사실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 ■

**16)** 파업 50일째를 맞이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강제 진압 반대 기자 회견을 한 이후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의 파업은 한국갤럽의 7월 3주차 대통령직무수행평균 여론조사(데일리 오피니언 제504호)에서 처음으로 주요 사건 목록에 올랐다. 이 대목은 한국갤럽이 하청노조의 파업을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즉, 언론이 주목하지 않는 사안은 여론의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조사 전문가의 인식이 반영된듯하다. 언론학의 의제 설정(agenda setting) 이론과 점화 효과(priming effect) 이론을 떠올리면 여론조사 전문가의 이러한 인식은 타당하다. 더구나 텔레비전 뉴스 이용률은 83.4%이지만 종이신문 이용률은 8.9%에 그친다는 점, 그리고 포털뉴스 이용자(79.2%) 가운데 많은 이들이 첫 화면에 올라와 있는 뉴스를 보지만 뉴스 배열 알고리즘으로 인해 종이신문 기사가 초기 화면에 게재될 가능성이 낮은 점(한국언론진흥재단, 2021) 등을 감안하면 방송 뉴스가 종이신문 뉴스보다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고 예측할 수 있다.

**17)** 박진준, <‘하퀴벌레’ 취급에 최저시급 - 한국 조선업의 현실>, MBC, 2022.7.21,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90775\\_35744.html](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90775_35744.html)

#### 참고문헌

<2021 언론수용자 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 2021.

Flynn, F. J., <No news is good news: The relationship between media attention and strike duration>, Industrial Relations, 39(1), pp.139-160, 2000.